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이창민_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목차 |

1. 머리말
2. 정부 주도의 일방향 협력 시대
3. 민간 주도의 쌍방향 협력 시대
4. 맺음말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이창민_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1. 머리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다양한 한일 간 갈등 이슈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이른바 투 트랙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에 한일 양국 정부의 명시적,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 왔다. 1990년대에 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갈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이후 독도,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한일 정부, 기업, 경제인 간의 교류와 협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되고, 원-엔 통화 스와프 연장이 거절되면서 투 트랙 접근이라는 원칙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8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의미로 큰 획을 그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했고,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급기야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보복적 성격이 짙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역사 갈등에서 시작된 불이 경제 갈등으로 옮겨붙었고 또다시 안보 갈등으로 확산할 위기에 처했다.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투 트랙 접근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2023년 이후 한일 양국 정부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기시다 총리도 이에 호응하면서 6월 말까지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전광석화처럼 완결되었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수출규제 이후 4년 만에 한일 경제 관계가 완전히 원상 복구된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8월에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면서 새로운 미래의 협력 의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한국

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경제 안보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듯 최근 몇 년간 극과 극을 달리며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온 한일 관계지만,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성격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약 45년간 양국 간 경제협력은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향(일본에서 한국으로) 협력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한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 주도의 협력 의제는 눈에 띄게 줄었고, 그 대신 양국 기업 간 쌍방향 협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던 중 경제 안보 이슈들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의제로 부상했고, 지난해 한일 관계의 급진전은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정부 주도의 일방향 협력 시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2000년대까지 약 45년에 걸친 한일 경제협력은 자금협력 → 기술협력 → 통화협력의 형태로 그 성격이 변화해 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가 경제협력의 주체였다는 점,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일방적인 협력이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제조업의 수직적 분업 관계가 탄생했고, 그 결과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무상 원조 3억 달러, 유상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3억 달러)은 때마침 시작된 박정희 정권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의 중요한 마중물로 활용되었다. 청구권자금은 대체로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지급되었는데, 총 8억 달러가 넘는 현금이 한국에 곧장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일본의 재화나 용역이 제공됨으로써 청구권자금은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무상 원조의 경우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민간 업체가 일본의 공급업자와 직접 구매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일본 정부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유상 차관은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이나 일본수출입은행이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민간 업체에 엔화 차관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른바 ‘타이드 론(tied loan)’이라고 해서 발주처가 일본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민간 신용은 기계나 플랜트 등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하여 일본수출입은행 등이 수입 대금을 대여해 주는 형태로 자금이 제공되었다. 결국 한국에 제공된 유무상 자금 및 민간 신용은 모두 일본 기업의 대한 수출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1953년 이후 추진해 왔던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을 조기 종료하고,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그 과정에서 의류와 신발 같은 노동 집약적인 공업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와 장비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자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금속, 화학, 전자, 조선, 자동차 등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또다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했고, 결국 대일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중화학공업화가 대일 무역 적자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2년 한일 정상회담(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 4.0 © 外務省)

1980년대에는 소위 안보경협 이슈가 대두되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년)의 수행 자금이 필요했던 전두환 정권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해 무거운 방위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일본은 역할 분담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차관 제공과 함께 기술 협력을 요구했지만, 부메랑 효과를 경계한 일본 기업들은 기술이전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1983년 1월 나카소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공공 차관 18.5억 달러, 일본수출입은행에 의한 융자 21.5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기술이전에 불안감을 가진 대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이 한국의 기술 연수생을 받아들였다.

1990년대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갈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한편, 한일 경제협력의 화두는 여전히 대일 무역역조의 개선과 기술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92년 1월에는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두 정상은 한일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에 합의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같은 해 9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이 설립되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일 기술협력의 기초를 이어 나갔다.

1990년대에는 청구권자금으로 시작된 일본의 일방적인 자금협력이 중단되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자금과는 별도로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엔 차관 공여의 형태로도 한국에 협력자금을 제공해 왔는데,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청구권자금을 제외한 엔화 차관은 2,500억 엔에 달했다. 그러나 1986~1988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더 이상 원조 대상국이 아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 위원회(DAC)는 1995년에 원조 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였고, 이듬해인 1996년 한국이 정식으로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 개발도상국 지위에서도 벗어났다.

한편,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일 경제협력의 형태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무리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렸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과 단기 외채 차입에 의존한 기업들로 인해 1997년 가을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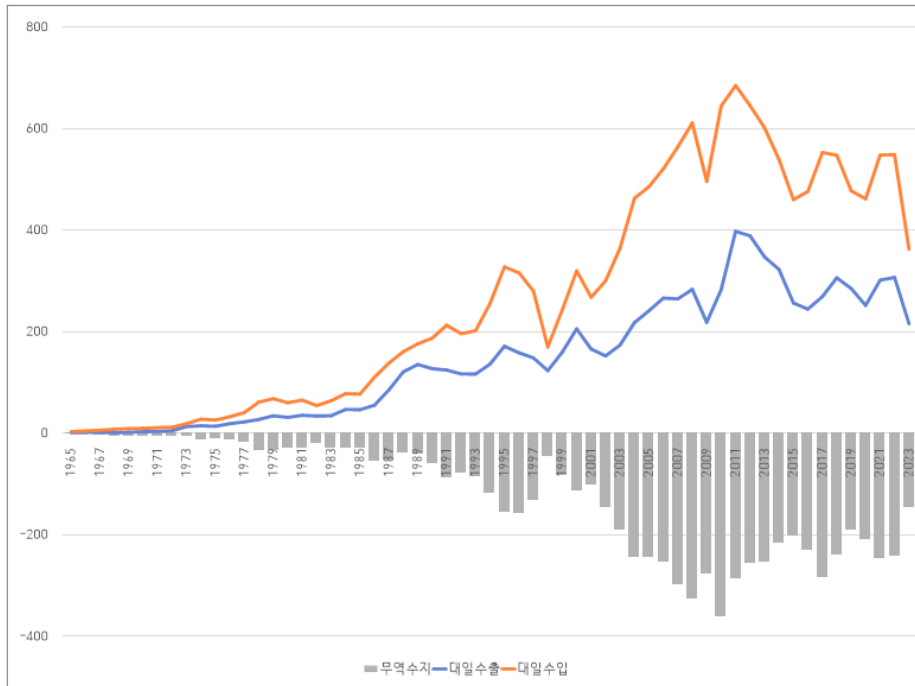
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IMF 구제금융의 다자적 프레임 속에서 일본 정부는 100억 달러의 2선 지원으로 한국의 외환위기에 도움을 주었다. 사실 100억 달러 규모의 2선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이 컸지만,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에서 통화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98년에 발표한 신미야자와(新宮澤) 구상을 통해 외환위기에 처했던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는 최대 50억 달러의 유동성을 한국에 제공하는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되었다.

이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대외 채무 증가와 외환 보유고 고갈의 위험성에서 벗어났다. 한일 양국 간의 통화협력은 2000년대에 들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통해 더욱 발전하였다. CMI 체제하에서 2001년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달러-원화 간 일방향(일본에서 한국으로) 스와프협정이 추가되었고, 그 후 2006년에는 원화와 엔화를 달러로 스와프하는 쌍방향 스와프로 전환되면서 스와프 총액이 15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화 스와프 덕에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큰 충격 없이 넘길 수 있었다. 이후 한일 간 통화 스와프는 2011년까지 7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다.

3. 민간 주도의 쌍방향 협력 시대

2010년대에 들어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약 45년간 유지되어 온 수직적인 분업 관계와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을 정점(361억 달러)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대일 수출과 대일 수입도 2011년을 정점(대일 수출 397억 달러, 대일 수입 683억 달러)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원인은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몇몇 수입품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양국의 제조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아세안(ASEAN)과 같은 제3국의 생산 거점에서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한일 간 경제력 격차 축소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한일 간의 수직적 분업 관계가 해체되면서 양국이 직접 교역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직접 교역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한일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제3국 등에서 기업 간 협력의 공간이 확장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10여 년간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향 협력의 정책 효능감은 많이 약화하였고, 양국 정부가 충돌하는 일도 잦아졌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일 정부 간 FTA 협상이 중단되었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 온 한일 간 통화 스와프도 2012년 이후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일 무역 구조(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2018년 이후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8월 28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9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맞대응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더 이상 일본은 경제협력 대상이 아니라는 여론이 끓어올랐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 한일 협력이 무조건 정답인 것도 아니었다. 예컨대 반도체 산업은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이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에 협력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은 과거의 보완적 관계에서 현재는 경쟁적 관계로 변화했기에 협력보다는 경쟁할 일이 많아졌다. 반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컴퓨터, 배터리, 카메라 등 외연이 확장되면서 양국 기업의 협력이 과거보다 더 강화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일 경제협력은 국민감정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경제협력은 오롯이 양국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결과였으며,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던 중 2023년에 한일 경제협력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이어서 5월에 기시다 총리가 이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었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이 4월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하자, 일본도 6월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하면서 2019년 7월 이후 만 4년 만에 한일 경제 관계가 수출규제 이전으로 완전히 복구되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일 경제협력의 현재라면, 2023년 8월에 성사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를 제시한 청사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한미일 3국은 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최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강화파트너십(RISE) 등 공급망 관련 다자 협의회를 통해 3국 공조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 등 상호 보완적인 분야가 이뤄지는 가운데 공급망 3각 연대가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간 한일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다. 아무리 큰 정부가 강조되는 경제 안보 시대라도 경제협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라는 점이다. 대중(對中) 견제의 키워



2023년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드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크잉으로 변경된 것은 설령 경제 안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섭리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망 재편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결국 기업의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에 충실한 정책만이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고, 한일 경제협력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경제적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4. 맺음말

미래의 한일 경제협력 분야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한일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점유율을 자랑하는 소부장 기업이 많고, 한국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성공한 대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소부장 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은 정교한 분업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해 왔고, 이러한 점에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갑작스러운 충격은 안정적인 한일 분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양국 정부는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일 간 갈등 이슈들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은 4차 산업혁명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혁명, 그린 혁명, 바이오 기술 혁신 등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장점인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일본 기업은 이노베이션에 강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초기 투자에 소극적인 편이고,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일 양국 기업들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것은 상호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미래 한일 경제협력의 지향점을 보여 주는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이다. 한일 양국은 해외 자원의 존도가 높고,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제조업으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면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중 공급망이 분단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시장도 포기할 수 없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딜레마는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추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 질서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미국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중국이 글로벌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속성’이다.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은 과거의 성장 지향에서 지속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본의 고령자 인구는 2025년 30%에 이르고, 한국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0%대이고 한국은 2% 이하로 떨어졌다. 과거 성장 지향의 한일 경제협력을 상징했던 반도체

체 같은 분야는 더 이상 발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양국 사회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예컨대, 양국에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령자 의료 모델을 개발한다면, 향후 고령화 문제를 겪게 될 많은 개도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 양국이 지방 활성화, 농업 재생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도시집중과 지방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이창민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도쿄공업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의 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지금 다시, 일본 정독』, 『아베노믹스와 저온호황』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톨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중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
- 제56호** 한중일 협력의 역사
- 제57호**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
- 제58호** 몽골인의 눈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
- 제59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